

與 “민주, 이재명과 자멸·국민정당 사이 양자택일해야”

“野 장외투쟁, 이재명 살리려는 어저지 퍼포먼스” “李 사법리스크 감추려 물타기...이재명 구하기”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이어가는 데 대해 “당대표의 사법 처리를 막겠다고 제1야당 전체가 장외투쟁 나선 것”이라며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인가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야당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을 주장하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강행에 맞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 공세에 대해선 “대한민국 흔들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방어막을 쳤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섰다”며 “이재명 대표를 살리기 위한 어저지 퍼포먼스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조사와 특검 그 이상의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대 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 무언인가. 기가 막힐 일”이라며 “대장동의 검은돈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들에게 유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역대 큰 지도자들 가운데 감옥에 안 가겠다고 당 전체를 자신과 공공 묶어 버린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과 함께 자멸할 것인가 국민정당의 길을 갈 것인가, 이제 민주당이 양자택일 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이상민 장관의 정치적 책임 문제를 민주당이 자주 거론하는데, 우리 당 입장은 수미일관”이라며 “국민적 비극을 정치에 이용하면서 국민 선택과 헌법에 따라 국정 수행하는 대통령을 끌어내려는 작태는 대한민국 흔들기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경찰과 사법당국에서 이 불행한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한 정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규명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토대로 모든 책임 소재를 가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입장에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9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우리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24일 본회의에서 일반적으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11일부터는 국정조사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하니 여안이 병병할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에서 서명을 받는 건 오로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감추고 시선을 돌리고 물타기하려는 이재명 구하기”라며 “대장동 의혹에 대해 송금 스캔들 핵심이라는 의혹까지 나온 것을 막기 위해 민주당 전체가 동원돼 역대 볼 수 없는 이상한 일을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당 관계자들도 이재명 방탄론에 가세했다.

정점식 의원은 “원내 제1당이 국회를 버려두고 원외투쟁으로 나섰다”며 “민주당 내부 정찰 다급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닌가 강한 의구심이 들 뿐”이라고 비꼬았다.

정 의원은 “이 대표를 둘러싸고 커지는 사법리스크를 참사 공세로 물타기 하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며 “진정 민주당이 참사를 정쟁의 도구를 키우려는 의도라면 민심의 역풍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이렇게 장외로 나가 대국민 여론전까지 벌이는 건 국가적 슬픔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대장동 비리의 검찰 칼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오자 택한 국면전환용, 방탄용 도구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정진석(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중혁 비대위원도 “이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수사량이 좁혀오자 장외투쟁을 앞세워 정부여당과 검찰을 압박하려는 것”이라며 “대장동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대표 최측근부터 성역 없이 수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김병민 비대위원은 “국민적 비극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의 패륜 정치를 즉각 그만두라”며 “국가적 비극마저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흔들려는 심산이 아니라면 왜 거대 의석 입법권을 뒤로 숨긴 채 장외에 나와 선동에 열을 올리겠느냐”고 주장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참사를 이용해 장외투쟁 운운하며 국민 시선 돌리기에 열을 올려도 소용없다”며 “이 대표 관련 사건 문제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국민께서 판단했고, 심판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이슬기자

한숙경 도의원, 청년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방식 개선 주문

기업 자부담 비율 순차적으로 늘려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최근 제367회 제

2차 정례회 일자리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참여기업이 최대 2년간 참여 청년 인건비의 20%를 자부담하고 있지만, 사업 종료 후 일정 기간 일률적인 지원이 끝나고 청년을 채용하게 될 경우 참여기업 입장에서선 100% 인건비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날 한숙경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경영난

을 겪으며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물론 청년들에게 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기업과 구직을 원하는 청년들을 위해서는 기업 자부담 비율을 2년간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보다 비율을 순차적으로 늘려가야 추후 기업이 안정적인 조건에서 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일자리 사업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거친 뒤, 청년 창업생태계 구축 일자리에 도전한다면 창업성공률이 높을 것이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지난 5분 발언에서도 주장했듯이 지역 일자리 사업에 도에서 주력하는 산업 외에도 소상공인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순천=김승호기자

민주, 언론자유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경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9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당대표 비서실로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전용기 MBC 탑승배제, YTN 민영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정부 공세 조직력 강화에 나섰다.

14일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언론자유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언론자유 특위 위원장은 고민정 최고위원이 맡는다.

안 수석대변인은 언론자유 특위에 대해 “최근 MBC에 대한 여러 탄압들 또 전용기 탑승 거부, YTN 민영화 등 여러 언론 자유와 독립을 침해하는 일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또 윤석열 정부 부정부패·특권 비리 조사위를 꾸리기로 했다. 조사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맡아 대대적 공세를 위한 기반 활동을 전개하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민주당은 김상희 전 국회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초저출산 인구위기 대책위도 마련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특위 구성에 대해 “당면 현안에 대처하면서 정책 마련,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